

News

징벌적 부동산稅 이어 … “부자 대출이자 더 높여라”

헤럴드경제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로 규정,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졌던 정부가 신용대출 증가세에도 비슷한 처방을 준비 중...부자들의 이자부담을 높여 대출을 억제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직접 금리를 건드릴 수는 없어...대신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을 '당부'...은행도 공감...금융당국이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을 용인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000만원 ... 중복 신청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손병우 금융위 부위원장, 15일 제2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중소기업에 2조5000억원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를 확대

윤종규 KB회장 3연임 하나…오늘 발표

뉴스

회추위, '숏리스트' 심층평가가 진행... 최종 후보 투표한 뒤 발표할 예정.... 시민단체들은 3연임 반대 기자회견
숏리스트에 윤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김병호 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 4명이 올라

역대 최저 코픽스에도 주담대 금리 ↑

아시아경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나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상승
은행이 자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 영향으로 해석... "주담대 금리에 반영되는 우대금리를 일부 조정하면서 최저, 최고 금리 구간이 올랐다"

요즘 뜨는 달러보험, '환차익 과세' 유권해석 받는다

머니투데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달러보험 시장이 급성장... 보험료를 원화로 냈을 경우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
이에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최근 국세청에 달러보험에 가입해 환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비대면 손보' 열풍 탄 메리츠화재… 소비자 불만 이상기류

데일리안

올해 상반기 국내 10대 손보사들이 직영 다이렉트 채널에서 체결한 신계약은 총 132만52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8% 증가한 것으로 집계
자체 다이렉트 채널 신계약,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같은 기간 불완전판매 155%↑...10대 손보사 80% 꼴

인수 무산 나흘만에 침묵 깐 현산…2천500억원 반환 소송 예고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지 나흘만인 15일 처음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 표명..사실상 계약금 2천500억원의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
현산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재차 설명...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음을 거듭 강조

“빚투 열풍 위험수위”… 증권사 신용융자 속속 중단

동아일보

'빚투' 열풍이 거세지자 자본 건전성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용공여를 중단...신용융자 규모는 9일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
삼성증권은 16일부터, 한국투자증권은 11일부터, 신한금융투자는 16일부터 예탁증권 담보 대출을 중단.. NH투자증권과 KB증권 역시 예탁증권 담보 대출을 중단한 상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